

설 명절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역시 부동산

“올해 집사라, 어떻게 당첨됐나, 집값 내릴때 분가하자”

결혼·연봉 등 단골 질문 뒷전
청약·주택경기 전망 등 화두

“아파트 청약당첨됐다면? 우리 애들한테도 방법 좀 알려주라.”

설 명절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지난 추석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 등의 얘기가 오갔다면 이번 설에는 하락장을 예상해 주택 매수 기대감이 엮보였다. 친지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선 개편된 청약 제도, 주택 매수 시점 등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지난 5일 설을 맞아 강원도 원주의 조부모댁에 찾아간 직장인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대한 친척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매년 들었던 ‘결혼은 언제 하느냐’, ‘연봉은 올랐느냐’ 등 단골 질문들은 뒷전이였다.

이 씨의 큰 아버지는 “요즘 명절 때 취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며 “대신 청약에 어떻게 당첨된 건지나 좀 알려 달라”고 물었다.

경북 포항에 차를 지내러 간 임 모씨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역이 귀경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8)도 친척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자 덕담으로 “올해는 꼭 집을 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임 씨는 “동기들에 비해 취업이 늦은 편이라 명절 때 취업이나 결혼 등에 대해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작년 추석 때부터는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지난해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으나 주제는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 추석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두고

아쉬움과 부러움의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번 설에는 하락 기대감에 매수 시점을 고민하는 얘기가 오갔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권 모씨(58)는 이번 명절에 자녀들과 주택 매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게 낫다”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놔기 때문에 가점이 꽤 나올 것 같다. 자녀들한테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하락하며 12주째 내리막 길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35% 하락해 2012년 9월 24일(-0.41%) 이후 6년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부터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중심의 우선 공급,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 소유 간주, 전매제한 강화와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 수요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 만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최 모씨(35) 부부는 명절 연휴에 가족끼리 상의해 올해 분가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분가 시기를

놓쳤다”며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설 이후에 신규 분양도 많기 때문에 청약을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2~3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4459가구로 전년 동기(2만7518가구) 대비 약 1.6배에 달한다.

한편, 주택 시장이 침체됐던 지방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싹트는 모양새다.

지역 산업 위기로 주택 시장에 냉기가 들고 있는 군산에서도 이번 명절엔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간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모씨(40)는 “군산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집값이 폭락해 이사도 못가고 있었다”며 “최근 예타 면제사업 등 호재가 생겼으니 곧 주택 시장에도 활기가 돌지 않을까 싶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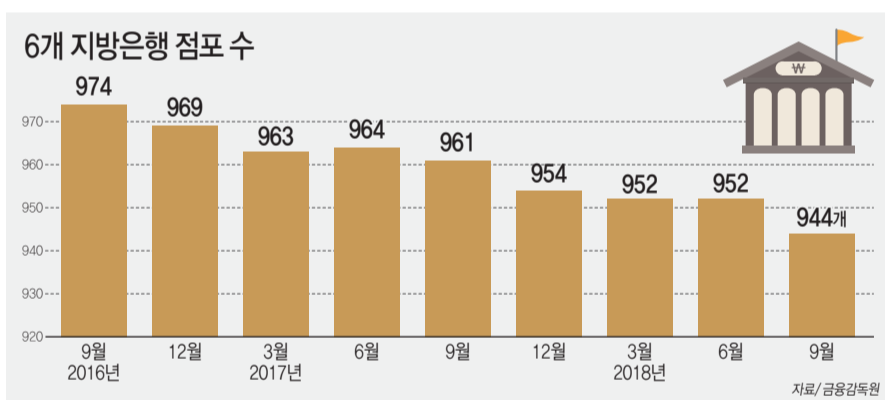
지점 줄이는 지방은행... 금융소외계층은 어디로 가야하나

비대면 서비스로 방문고객 줄어들어
효율성·비용절감 극대화 위한 선택
금감원, 지역 특성맞춘 운영방안 검토

지방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점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점포 축소 대상이 서울보다 지방에 치우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출장소를 포함한 전체 은행지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5617개다. 그 중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총 6개 지방은행의 국내 점포 수(출장소 포함)는 지난해 9월 기준 944개로 전년보다 17개(961개) 점포가 줄었다.

특히 부산은행의 점포 수는 258개로 전년 268개에 비해 10개나 감소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출장소로 줄이거나, 가깝게 있어 중복된 지점이 있는 경우 통합하기도 했다”며 “비대면 거래 등이 발달하면서 고객 수가 줄어 지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



대되면서 은행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자 저수익의 점포나 중복 점포를 통폐합해 영업체력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지방 점포 감소... 소외계층 불편

반면 지방은행의 점포가 줄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농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편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지방은행은 경기가 침체되는 지방 대신 수도권과 해외에 집중해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제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수도권 지역 점포는 총 72개로 지난 2014년 말(34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 등에 어려움을 느껴 지점

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령층은 지방에 더 많이 살고 있지만, 수요와 반대로 지점을 지방에서 더욱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점 폐쇄 최소화를 위해 ‘지점 폐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점포 폐쇄 이후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연내 모범규준을 도입해 무분별한 은행지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점포 감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점 축소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예전처럼 고객이 많이 찾는 지점은 손에 꼽힌다”며 “시중은행 만큼 대폭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선 지점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지점에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이 줄어들었다는 것. 실제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일 평균 이용 건수는 이전 분기보다 7.5% 증가한 1억1664만건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해 입출금 이체 등 간편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점포 폐쇄 후 조치하고 있는 ATM기기 운영방식 외에도 고객특성에 맞춰 도심 도서 산간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심과 도서 산간지역은 고객 연령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ATM기기 하나로 소비자 불편을 모두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고객 특성에 맞게 복합점포나 공동점포, 탄력점포 운영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내외주 기자 yul115@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전국에 877대 보급 확정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저상버스 877대가 전국에 보급된다.

국도교통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올해 보급하는 저상버스 규모를 작년(802대)보다 9.5% 늘린 877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일반버스보다 가격이 비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구입비 차액(약 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의 경우 국가가 40%, 서울시가 60% 내고 있다.

올해는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구매하면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 1억 원도 함께 지원한다.

국도부는 또 정부의 친환경 차량 우선 공급 정책에 따라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했다. 압축천가스(CNG)·디젤 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등을 고려해 배정했다.

환경부와의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친환경 차량 공급 방안에서 2022년까지 전기·수소 버스 5000대를 보급, 현재 25% 수준인 친환경 버스 비율을 2022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국토부는 기존 저상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로만 바꿀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는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어촌에 도입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지난해 中 수출입 ‘마이너스’ 전환... 올해 관건은 ‘무역분쟁’

한은 ‘중 대외무역 현황·전망’ 보고서
선진국 수요 감소·내수 위축 등 둔화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대외무역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0%로 전분기(11.7%) 대비 급락했다. 월별로 보면 10월에는 14.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1월 3.9%, 12월 -4.4%로 감소 전환했다.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도 20.3%에서 4.4%로 급격히 둔화했다. 10월 증가율은 20.3%를 기록했으나 11월 2.9%, 12월 -7.6%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입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가운데 주요 선진국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내수 시장까지 위축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지난해 11월까지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12월 -3.5%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말 G20 회의를 통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2000억달러 규모)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영향이다. 중국의 선(先) 수출 유인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 스마트폰,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력 전자제품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

세부과대상인 신발 등 저부가가치 품목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수입은 중국의 소비 등 내수심리 위축으로 내구재 관련 품목이 감소했다. 무역분쟁 여파에 대두 등 일부 농산물 수입도 축소됐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분쟁이 해소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은 회복실성 완화, 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입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99@